

# 세계 3위 경제대국 ... 이웃과 화해는 '먼 길'

## 전후 70년 일본의 '두 얼굴'

패전 후 잦아들던 속에서 새출발한 일본은 지난 70년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왔다. 하지만 자신들의 무모한 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을 겪은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화해 공정'은 심화하는 과거사 갈등 속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유엔 분담금 2위 국가로=일본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줬지만 유엔 분담금면에서는 여전히 세계 2위다. 올해 일본의 유엔 분담금은 2억 9400만 달러(약 3469억 원)로 전체의 10.8%를 담당하고 있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탈퇴(1933년)하며 '군국주의 폭주'를 했던 일본이었음을 감안할 때 극적인 변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각종 국제회의의 계기에 개발도상국에 제공기로 약속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은 보통 한국이 쓰는 금액에 비해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

## 국제연맹 탈퇴 '문제아'서 유엔 분담금 2위로

### 한국·중국과 과거사 갈등 여전... 독일과 대비

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이제껏 유무상으로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약 37조 6000억 엔(약 355조 원)에 달했다.

패전 이후 동서 냉전 속에 자유 민주주의의 진영에 편입된 일본은 이 같은 '엔화 파워'를 활용,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준 한국, 중국, 동남아 각국과의 개별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한국전쟁 특수 등을 누린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전쟁 피해국들에 각각 수백억 엔~수천억 엔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1977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총리의 '후쿠다 독트린'은 동남아 각국과의 화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한국과는 1965년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무상 3억·유상 2억 달러)를 제공했고 1980년대 한국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경협을 진행했다.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한 중국에는 3조 엔 이상의 엔 차관을 제공, 개혁·개방의 종자돈을 냈다.

◇ 한·중과의 요원한 화해=하지만 한국, 중국 등 이웃국가와의 진정한 화해는 아직 '먼 길'이다. 바로 이 대목이 같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프랑스, 폴란드 등 이웃국가들과 화해한 뒤 유럽연합(EU)의 '지도국' 역할을 하는 독일과 자주 대비된다.

화해를 가로막는 최대 난제는 결국 피해와 가해의 '역사' 문제다. 한일관계의 경우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국교정상화(1965년) 이후 오랜시간 숨죽이고 있었던 군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들이 민주화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역사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남은 과거사의 과제를 적극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청구권 협정

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법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을 한국이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골대 이동론'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이런 태도는 현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결부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일례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 일본 정부의 대응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꾸준히 퇴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군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 여부로 축소하려 애써온 아베 내각은 작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사망)의 일제시기 한국 여성 강제연행 증언에 기반한 기사들을 취소한 이후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는 데 외교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국가 지도부'의 퇴행적 역사인식 속에 교육 현장에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다 식민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는 '우익사관'을 바탕으로 철저한 자국 중심의 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상황은 '화해의 길'에서 일본이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은 화해를 위한 쌍방의 노력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 "일본이 세계 평화에 공헌"

### 아베, 프란치스코 교황에 편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이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앞으로 쓴 편지를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예정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지명당 중의원에게 11일 전했다.

가와이 의원은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전후 70년, 피폭 70년에 일본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자세와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후 70년간 일본의 국제 공헌이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가 편지에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가와이 의원은 13일 바티칸의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동남아 해상 해적 기승

### 납치·약탈 등 79건 발생

동남아시아 해상이 해적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12일 민간 해적감시 기구인 국제해사국(IMB)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전 세계 해적사건은 13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5.5% 증가했다.

이중 동남아 해상에서 일어난 해적의 공격과 납치, 약탈 미수 등은 21.5% 급증한 79건으로 전체 사건의 59.0%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역과 이들 나라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이 해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말라카 해협은 태평양과 인도양,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주요 바닷길로 유조선선을 비롯해 매년 8만여 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알바다에서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이 해적에게 납치돼 운반 중이던 약 8억 원어치의 기름을 빼앗기고 다음 날 풀려났다.

6월 11일에는 말라카 해협에서 62억 원어치의 기름을 운반하던 말레이시아 선적 유조선이 해적에게 납치됐다.

당시 총기로 무장한 8명의 해적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트남 해역에서 베트남 해안경비대에 붙잡혔다.

말라카 해협 주변 국가들은 해적사건이 빈발하자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말라카 해협의 항해 안전 확보를 위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다.

IMB는 동남아 해상의 해적사건 증가세에 대해 우려하며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지뢰 도발' '대북 심리전'

### 中, 한반도 상황 예의주시

북한의 '지뢰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중국 측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지는 12일 신화통신, AFP 통신 등을 인용해 한국정부가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에 사과를 촉구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 한국을 방문 중인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이 "북한지뢰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이 휴전선에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부 외신을 인용, "영향이 된 양측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한반도 평론가인 정하오(鄭浩)는 이날 홍콩 봉황망(鳳凰)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이번 지뢰도발 사태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거론하며 매우 경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전수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유사 사건에 대해 경경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패전일(8월15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10월10일) 등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한반도는 현재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긴장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당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그리스, 골칫거리 난민 그리스 경찰관들이 11일(현지시간) 그리스 남동부의 코스섬에서 난민들의 등록절차 도중 발생한 난투극을 말리기 위해 소화를 뿌리고 있다. 관계당국은 인근의 터키 해안에서 고무보트로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中 위안화 절하' 쟁점 부상

### 연준 금리인상 계획 영향 ... 미의회 비판 거셀 듯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내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위안화 절하 압박이 양국 간에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환율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위안화 환율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랜 갈등 요인이었다. 만성적인 대(對)중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은

그 원인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를 지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중국은 무역 불균형이나 실업 등 미국의 경제문제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 중국의 환시장 개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위안화 환율이 실질적으로 절상되면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11일 중국의 전격적인 평가절하로 논란을 재점화했다고 NYT

는 지적했다.

NYT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해킹 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서 미국과 원만한 해결을 타진하던 중국 입장에서 이번 평가절하 조치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번 절하 조치가 미국, 특히 의회 내 비판세력에는 '수출 진작을 위한 환율 조작'으로 받아들여져 '휴먼 상태'이던 환율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어께에도 적지않은 짐을 지을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융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 시설 **완비**
- **에어컨 2대 내부깔끔**  
(시비약간있음)

**보 2천만 월 130만**

**급매 / 부동산 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임직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완동 수완지구 4층중 3층 86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직접 운영시 1800만**

매매가 15억 (보 2억, 융 6억) | 건물 올 리모델링  
임대 완료 만실!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인테리어 중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010-7384-7800 / 010-6670-9800